

◆ 6월 25일(목)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ttp://www.kcue.or.kr

2026. 6. 25.(목)

☎ 02-6919-3901, 3903 고등교육연구소장: 강낙원 / 정책연구팀장: 김정희 / 담당: 신영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 건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과정상의 각종 규제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통해 적시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개선 방안을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였다.
- 대교협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내실있는 성과 도출 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섯 차례(2026. 2.12., 3.5., 3.24., 4.14., 5.29.)에 걸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제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대학 재정지원사업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 유사 사업의 통합 및 패키지화 건의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사업 등 대상이 중복되는 여러 사업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 통합 운영하거나 '청년고용서비스'라는 단일 체계로 대상별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개편 필요

- 대학의 자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 여부 조회 권한 건의

- 취업의 성사 및 취업 유지가 사업의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자교 졸업생의 취업 여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공DB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취업지원연계 체계의 구축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생활장려금 당월 미지급분의 익월 지급 허용

- 인건비 및 BK21 장학금 지급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부족액을 연구생활장려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부족액 현황 파악과 지급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익월 지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규정상 익월 지급이 불가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의 개선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중심대학사업 전담인력 참여율 규정의 현실화 필요

- 전담인력의 사업참여율(100%) 규정은 다른 부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사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저해하고, 창업 인프라 확장을 막는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참여율의 탄력적 조정이 요청됨

- 창업분야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중심 평가체계의로의 전환 건의

- 청년 창업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응자금 규모 중심의 평가보다는 창업기업 성장, 창업교육 성과 등 성과중심 평가체계의로의 전환 필요

【교육부】

-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의 가산점 제도 개선 건의

- 특정 항목에 치중된 가산점 부여보다는 대학별 여건과 학문 특성을 반영한 가산점 제도로 개선 건의

- 4단계 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필요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편성이 프로그램 운영비 내에서 자율편성 하도록 되어있어 안정적 인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예산 편성 기준에서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별도 항목화하는 최소 편성기준 마련 필요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구 RISE) 국립대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 대학 내 교직원의 사업 참여 독려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필요

※ 사립대학, 국립 특성화 지방대학(전 글로벌대학, 지원금의 5% 이내) 지급 가능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평가방식 개선

- 지자체의 대응투자 확보여부가 선정평가의 중요 요소가 되면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참여 여건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학의 특성화 추진 능력이 함께 반영될 수 있는 평가방식으로 개선 필요

□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하여 제도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대학 재정지원사업 규제개선 건의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 ① 유사 사업의 통합 및 패키지화 건의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재학생·졸업생·지역청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졸업생·졸업예정자·지역청년), 일자리찾기 걸음보장센터(졸업생·지역청년) 등 다수의 사업이 졸업생과 34세 이하 지역청년을 공통 대상으로 함 • 거의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각각 제출해야하는 데에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사업의 통합 및 패키지화를 통해 대상이 중복되는 여러 사업을 통합 운영 - 사업이 집중해야 할 대상층을 명확히 분리하거나 동일 대학 내에서 수행되는 청년고용 사업 간 실적 배분이나 중복 참여의 유연한 적용 필요 -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은 차등 배정·운영하더라도 사업 지침 및 평가기준 등은 일원화하여 운영, 평가, 회계감사 등의 통합 운영 필요

2. (고용노동부) ② 대학의 자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 여부 조회 권한 건의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교 졸업생에 대한 고용보험DB 조회 권한 없음 • 건강보험DB의 경우 1년 뒤 조회 가능하여 실효성 없음 (2026년 2월 졸업자, 2027년 공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사업 참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정보 조회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내역 이력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DB 조회 권한 부여로 자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 여부 상시 조회 체계 구축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한국폴리텍대학*의 사례를 기반으로 자교 졸업생 개인정보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 <p>*한국폴리텍대학: 학과에서 취업 연계 후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DB를 통해 퇴직 여부 모니터링, 재취업 연계 진행</p>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연구생활장려금 당월 미지급분의 익월 지급 허용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액 현황 파악을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당월 미지급분에 대하여 익월 지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근거에 따른 미지급분에 대한 익월 지급을 허용하여 학생의 경제 안정성 및 연구 환경 보장

4. (중소벤처기업부) ① 창업중심대학사업 전담인력 참여율 규정의 현실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인력 사업 참여율 100%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창업 사업 사례와 같이 인적 자원의 전략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참여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요청

5. (중소벤처기업부) ② 창업분야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중심 평가체계로의 전환 건의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대학들이 사업 선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 요소를 거의 최고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므로 이후 사업 선정과 지원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주로 '자기 부담사업비 및 투자재원 확보' 요건이 결정하는 구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정책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 대응자금 의무보다는 성과관리 중요 - 대응자금 확보 규모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

6. (교육부) ①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의 가산점 제도 개선 건의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정성평가 100점 • '24년 혁신성과 100점 + 가점(유형1+2, 25% 이상 시, 최대 10점) • '25년 혁신성과 100점 + 가점(유형1+2, 25% 이상 시, 최대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쏠림, 중도이탈 증가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특정 항목 중심의 가산점 제도보다는 학문단위의 다양성 유지 측면에서 대학별 여건과 학문 특성을 반영한 가산점 제도로 개선 필요

7. (교육부) ② 4단계 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필요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기준에서 대학원생 장학금(55~66%), 운영비(10%)를 제외한 잔여 재원을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가 교육과정개발비, 산학협력비 등과 경쟁 구조에 놓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별도 항목화 및 비율 설정 요청 (대학원생 수와 연계하여 차등 기준 적용)

8. (교육부) ③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구 RISE) 국립대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대학: 지급 가능 • 국립대학: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 지급 불가 • 국립 특성화 지방대학(전 글로벌대학): 지원금의 5% 이내 인센티브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교직원의 사업 참여 독려 및 타 대학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립대 교직원에게 대한 수당 및 성과급 지급 근거 요청 ※ 국고사업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 풀링제 도입 검토 필요

9. (교육부) ④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평가방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지자체 현금 대응투자 규모를 사업선정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정여건 보다는 대학의 특성화 추진능력에 따라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

<끝>